

내년 '반도체株 주목'... IT 업고 2400까지 반등

전문가 2020 증시 전망

은행·철강 제외 대부분 '호재' 영업익 개선폭 '반도체' 비중 40%

1분기 美연준 자산 사상 최대 전망 美 대선 분위기 따라 증시 요동칠 듯

증권업계가 바라보는 내년 증시 전망은 밝다. 경제는 올 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부터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정보기술(IT) 업종의 긍정적인 약진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정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개 증권사(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는 내년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내년 코스피 지수가 2480포인트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현재 지수와 비교해서 20% 가량 오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IT 분야 약진 기대

내년 코스피 상승을 이끌 업종은 무엇보다 IT가 꼽히고 있다. 5개 증권사 모두 추천 업종으로 반도체 등 IT 업종을 꼽았다.

내년 코스피 상장사 실적 개선의 40%를 반도체 업종이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

〈증권사 리서치센터 2020년 투자전략〉

증권사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코스피 밴드	2,080~2,430	1,900 ~ 2,480	~2400	2,000~2,400	2,000~2,400
기회	①2019년 주요국 금리인하 효과 ②IT 신제품 사이클 ③미중 관세갈등 진정	미중 간의 점진적인 관세율 인하	①연준 통화부양 정책 카드 ②미중 무역 갈등 소강 국면 진입	①소.부.장. 투자지원 등 투자활성화 유도 ② 인덱스의 제한적 상승으로 중소형주 투자관심 확대 ③ 경기침체 우려 완화	2019년 주요국 금리인하 효과 및 자산매입 재개
위험	미국 대선 이후 변곡점 발생 가능성	미중 패권전쟁 글로벌 부채리스크	미국 민주당에서 반자본주의 성향의 후보가 급부상할 경우 2020년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폭이 커질 때	위안화 움직임	국내 주식 비중 줄이는 국내 연기금
추천종목	반도체/무선통신기기/건강관리/화장품	IT(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시클릭(조선, 에너지, 화학)	반도체, OLED, 미디어/엔터(한류)	IT 소.부.장 관련 산업	반도체, 은행,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중국 관련 엔터, 미디어, 호텔/레저
투자전략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유리	대형주 비중 확대, 성장주, 그 중에서도 차별적인 성장매력, 수요요멘텀이 존재하는 업종만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고PER와 저PBR주에 관심.	중국 내수소비관련 산업, 기대수익률이 높은 미드캡, 스몰캡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미국과 중국 주식, 하이일드, 구리 자산

는 2020년에는 은행과 철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이익 개선 폭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이다"고 말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 '시장 비중'(market weight)에서 '비중 확대'(overweight)로 상향조정했다. 근거는 2020년 글로벌 경기 회복과 기술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실적 개선을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은 올해 -33%에서 내년 22%로 반등할 것"이라며 메모리 가격 안정화와 DRAM·낸드(NAND) 재고 정상화, 5세대 이동통신(5G)

수요 증가 등이 실적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은행들이 양적완화 기조와 더불어 자산매입을 시작한 것도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 달리는 약세를 보인다. 이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 호재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은 2019년 하반기부터 자산매입을 재개했다"면서 "내년 1분기 어느 시점쯤 총 자산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과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산 매입을 시행했을 때 달리는

약세흐름이 뚜렷했다. 지난 2년간 강세흐름이 끝날 것"이라며 "약달리는 코스피에 특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과 중국이 변수

역시 코스피 방향은 미·중 무역협상의 방향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중국의 경기부양, 미국의 대선이 있는 만큼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 대선 분위기에 따라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흔들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오태동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은 "월가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엘리자베스 워렌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는 IT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해체, 조세 피난처 단속 등 반자본주의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워렌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의 불안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안화의 방향도 주시해야 한다. 현재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에 그친 후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분기 중국 성장률이 27년만에 6%에 그쳐 성장동력이 약화된 탓도 크다. 향후 국내 증시는 위안화의 방향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위안화 약세가 2020년 이후로도 계속되고 확대되면 가급적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줄여야 한다"면서 "코스피 2600 탈환에 대한 희망적 시나리오는 위안화가 안정되고 6위안대 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주가수익비율(PER) 부담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상장사의 이익 성장도 기대되고 있어서다.

정보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4곳의 내년 실적 전망치를 취합한 결과 매출액은 2049조 1199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5.6%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163조 8974억원으로 27%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90%에 육박하는 172곳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망 이용료 갈등'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

정부,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연내 확정 업계 "사업자간 협상, 해소 불가능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포함돼야"



방송통신위원회 반상권 이용정책총괄과장이 4일 망이용계약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망 이용료를 두고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만 옥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정책총괄과장은 전날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동영상 서비스가 발달하는 5G 시대에는 트래픽 유발이나 망 이용과 관련 민감한 사업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망 이용계약을 두고 ISP와

국내의 CP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했다. 트래픽 관리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이드라인의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 수용할 것을 강요 ▲ 불합리한 사유 들어 계약 지연하거나 거부 ▲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거부할 것을 요구 ▲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부당하게 경쟁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역차별,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간 협상만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번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합리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구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아울러 애초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특히 글로벌 사업자에게 구속력이 없어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본질적인 집행력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망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을 존중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상권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향후 사업자 간 법적 문제 발생 시 정부에 법령 해석 기준과 시그널을 제시하고, 입법 마련 시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국내외 대형 CP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망 이용대가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나인 기자 silkni@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정상화 미동참뎀 '4+1협의체' 공조

민주당, 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응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내 정치 일정은 일일이 감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 버스 탑승을 결정하지 않으면 버스에 오를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라며 199개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행위 방해)를 거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통제한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는 오는 9일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하루 전이다. 이날 전까지 한국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처리하겠

단 방침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한국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남았다. 사실상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 구상이다.

앞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2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손을 떠났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헌법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30일 전이다. 예결위가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도 적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후 '신속처리 안전(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개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개도 4개 야당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하겠다 방침이다. 실제 '4+1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석대성 기자 bigstar@